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보수의 역할과 대안
발제자: 이각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일 시: 2017년 04월 20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제 25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04월 20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이각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를 연사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보수의 역할과 대안'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한국의 근대혁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세계적 안목을 가진 이승만 前대통령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당시 일본 전력이 막강하였기에 일본에 대한 투쟁이 소모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UN을 통한 독립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이승만 前대통령의 토지개혁은 신분제 철폐와 시장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 보수 진영은 보편성(Universalism)을 지향하고, 진보 진영은 특수성(Particularism)을 지향한다. 즉 보수 진영은 보편적 논리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을 추구한다. 이와 반대로 진보 진영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로부터 논리를 떠나간다.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끌어가고, 오프라인이 온라인과 결합하면서 경제와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우선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World)가 도래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공간체계, 삶의 양식과 존재양식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으로 사

라지는 일자리 수'가 '기술혁신으로 생겨나는 일자리 수'를 압도할 것이다. 앞으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되고, 교육과 직업의 불일치로 청년실업현상이 만성화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주기와 생활주기가 달라지면서 노동의 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관료제와 같은 통합적 체계가 아닌 분산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산업사회의 학문은 전문화·세분화 과정을 거쳐 왔으므로 한 개인이 그 광범위한 지식을 소화할 수 없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전문화·세분화된 지식이 통섭(Consilience)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교육개혁은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지식 주입을 거부하는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 체계에서는 교사가 가르치기(teaching)보다는 지도형태의 조언(mentor)에 더 가까운 모습을 띤다.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개별화된 교육을, 입시중심 교육보다는 창의성 중심 교육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식을 적시에 습득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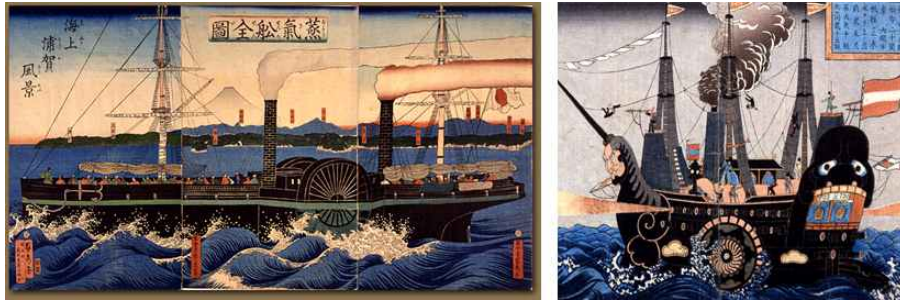
■ 제4차 산업혁명 추세를 외면하는 정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개인정보 보호강화의 데이터 유통 차단 ▲교육평준화 강화 ▲의료영리법인 설립 및 원격진료 금지 ▲노동시장 경직화와 성과급 철폐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행위 인정 ▲저세금·고복지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 전가 등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제언이다.

■ 아시아가 맞이한 제1차 산업혁명과 근대화

: 일본 메이지 유신, 중국 공산혁명,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출발점

- 산업혁명은 그 전 시대의 시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아시아는 제1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였다. 에도 막부 말기인 1853년, 페리 제독이 이끄는 증기선인 흑선(Black Ship)이 도쿄만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 쇄국을 주창한 존왕양이(尊王攘夷)세력이 물러서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면서 일본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사상적 지도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구문명을 적극 받아들여 일본의 근대화를 달성하자고 외쳤던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에도 막부 시대의 사농공상 구별을 폐지하고 사민평등을 구가하는 신분제도의 철폐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근대화의 주도세력은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청렴한 자세를 보였다.

- 아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은 중국 공산정권 수립과 함께 나타났다. 중국 공산혁명이 성공한 데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할이 컸다. 역사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철저히 규율에 따라 움직인 정치군대라고 칭송되었다. '절대로 점령하는 지역의 부녀자를 겁탈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지 않고, 주거공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율을 지켰다고 알려졌다.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대장정(大長征)을 이끌면서 이루었던 농민해방은 항일전쟁과 중국 공산혁명이 성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 1853년 도쿄만에 나타난 페리 제독의 흑선

- 한국의 근대혁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세계적 안목을 가진 이승만 前대통령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당시 일본 전력이 막강하였기에 일본에 대한 투쟁이 소모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UN을 통한 독립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이승만 前대통령의 토지개혁은 신분제 철폐와 시장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2]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
전경 (1948년)/
출처 국가기록원

■ 한국 보수의 지향점 발자취

: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본 보수 진영의 성공과 실패

- 보수 진영은 보편성(Universalism)을 지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특수성(Particularism)을 지향한다. 즉 보수 진영은 보편적 논리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을 추구한다. 오늘날 보수 진영은 ‘만민은 인권을 갖는다.’는 보편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법’, ‘북한핵무장에 의한 평화 위협’과 ‘FTA를 통한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진보 진영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로부터 논리를 떠나간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기반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을 따른다. ‘핵무기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다.’ 혹은 ‘한미FTA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한다.’등의 주장이 진보 진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보수 진영의 보편성에 의해 수립되었다. UN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독립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 1대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남한에 배정된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고, 북한에 배정된 100명

의원은 소련군의 저지로 선출하지 못하여 국회에 의석을 비워두었다.

- 박정희 前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을 자주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10월 유신선언을 통해 ‘정치로 인한 낭비와 비능률을 일소하자.’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민교육헌정에서도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겠다.’고 외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을 꿈꿔왔던 10월 유신은 실패하였다. 기존 정권의 기득권세력이 온존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와 언론은 바르지 못하고 부패하였다. 기존 정권의 기득권세력마저 청렴하지 못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았기에 비능률적인 정치구조를 개혁하지 못하였다. 한국 사회는 오늘날까지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치적 발전과정에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은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노동개혁

: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경제·노동시장의 변화와 위기

- 제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하는 기계가 발명되면서 시작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활동을 기계와 기술로 대체하는 혁명으로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는 이전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모여 같이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된 공간에서 네트워크에 의해 시차를 가지고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산업사회의 기본적 급여 지급방식은 시간당 임금을 주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성과 여부에 따라 임금을 주는 방식을 따를 것이다.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클 포터 박사의 명저 『경쟁론』에 의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 정의한다. 운영상의 효율(Operational Effectiveness, OE)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는 ‘선도자(First-Mover)’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비약적 축적이 가능해졌다. 이전 컴퓨터의 연산력은 수치 분석에 그쳤다. 융합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영상과 이미지 대용량 촬영이 가능해졌다. 우주탐색, 지구탐색과 시청각 자료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저장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이 선순환을 일으킨다면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끌어가고, 오프라인이 온라인과 결합하면서 경제와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우선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World)가 도래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공간체계, 삶의 양식과 존재양식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수’가 ‘기술혁신으로 생겨나는 일자리 수’를 압도할 것이다. 앞으로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되고, 교육과 직업의 불일치로 청년

실업현상이 만성화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주기와 생활주기가 달라지면서 노동의 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알렸던 클라우스 슈밥은 “새로운 기술이 노동의 본질을 뒤바꿀 것”이라 예측하였다. 기술의 고용파괴 효과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전업하는 ‘제 1효과’로 정의된다.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창출되는 자본화 효과, 즉 ‘제 2효과’로 나타난다. 클라우스 슈밥은 “제 1효과가 제 2효과를 압도하면서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자동화에 따라 없어질 고(高)위험 직업군과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저(低)위험 직업을 분류하여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고위험 직업군		저위험 직업군	
가능성	직업	가능성	직업
0.99	텔레마케터	0.0031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치료 사회복지사
0.99	세무대리인	0.004	안무가
0.98	보험조정인	0.0042	내과·외과 의사
0.98	스포츠 심판	0.0043	심리학자
0.98	법률비서	0.0055	HR 매니저
0.97	레스토랑, 커피숍 종업원	0.0065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0.97	부동산업자/부동산 중개업자	0.0077	언류학자, 고고학자
0.97	외국인노동자 농장 계약자	0.01	선박 기관사, 조선기사
0.96	비서직(법률, 의학, 경영 임원의 비서직 제외)	0.013	세일즈 매니저
0.64	배달직	0.015	전문경영인

※수치는 0에 가까울수록 자동화 저위험 직업군, 1에 가까울수록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군.

【그림 3】자동화에 따른 고위험 직업군과 저위험 직업군 (출처: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p.70)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각과 실행이 통합(Integration of Mind and Execution)된다. 스마트 워크(Smart Work)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노동시장이 전면적으로 유연화되어야 한다. 스마트 워크란 수직적 위계구조(Vertical Hierarchical Structure)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기반(Horizontal Network Based)의 업무로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집합지성이 형성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2017년 4월 17일자 게재된 김희평 문화일보 논설위원 칼럼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소수에게 치우친 노동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규직 노조 중심의 상위 10%만 고임금을 누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제를 철폐해야 하고, 나머지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고령노동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탈바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독일 슈뢰더(Schroeder) 총리의 사회적 대타협을 참고할 수 있다. 슈뢰더 총리는 하르츠(Hartz) 개혁을 통해 2005년 11.2%에 도달했던 실업률을 2016년 4.1%로 감소시켰다. 슈뢰더 총리가 직접 ‘노동시장 서비스 근대화 위원회(노동개혁위원)’를 구성하여 매일 협의하고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누적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제도화하여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허용하였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1유로를 급여에 추가하는 ‘1유로잡’ 증가를 유도하였다. 고용정보 관련 데이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였고 기술변화에 따른 직업교육도 강화였다. 실시간으로 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 사회도 이와 같은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규제 개혁 방향

: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전문화·세분화보다 통섭·융합을 지향해야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관료제와 같은 통합적 체계가 아닌 분산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산업사회의 학문은 전문화·세분화 과정을 거쳐 왔으므로 한 개인이 그 광범위한 지식을 소화할 수 없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전문화·세분화된 지식이 통섭(Consilience) 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교육개혁은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지식 주입을 거부하는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 체계에서는 교사가 가르치기(teaching)보다는 지도형태의 조연(mentor)에 더 가까운 모습을 띤다.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개별화된 교육을, 입시중심 교육보다는 창의성 중심 교육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식을 적시에 습득하는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 정부혁신은 지능정보사회에 맞지 않는 산업별 정부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융합(Convergence)이라는 추세에 따라 부서별,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수평적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구조 개편보다는 인사, 조직, 복무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과로써 평가해야 한다. 부처·부서 간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기업 같은 정부(Enterprising Government)’를 만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전자정부 형태로 컴퓨터로 민원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게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청구할 때 하나의 정부로서 원스탑(One-Stop)·논스탑(Non-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
- 한국 사회는 정부가 만든 산업규제, 노동조합이 만든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적 이익단체가 만든 사회적 규제 등 ‘삼중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하고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를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로 전환해야 한다. 허용된 프레임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 오늘날 보수의 대안

: 사회의 정상화·투명화·합리화를 위해 국가를 향한 구심력을 강화해야

- 제4차 산업혁명 추세를 외면하는 정책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개인정보 보호강화의 데이터 유통 차단 ▲교육평준화 강화 ▲의료영리법인 설립 및 원격진료 금지 ▲노동시장 경직화와 성과급 철폐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행위 인정 ▲저세금·고복지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 전가 등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제언

이다.

- 러시아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진보적 지식인들은 ‘국가가 우선인가, 계급이 우선인가’를 고민했다. 오늘날 한국 지식인들은 ‘국가가 우선인가, 소속집단이 우선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국가를 향한 구심력보다도 소속집단을 향한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맞는 보수 진영의 대안은 보편성을 기반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황폐화된 윤리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수 진영이 한국 사회의 정상화, 투명화, 합리화에 앞장서야 한다. 힘의 논리를 법의 논리로 극복하여 정상화를 이루고,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명화를 이루고, 낡은 제도를 개편하여 정치 프로세스의 합리화를 달성해야 한다.

제 252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오늘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과연 직접 민주주의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답변 권위의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권위를 갖는 세상을 지향한다.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투표권을 행사하여 원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미국 대학생들은 ‘민주주의가 곧 법치주의’라고 인식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만 한다. 최근 촛불시위가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 경험을 통하여 볼 때 모든 국정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국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보다 나은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질문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실업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답변 ‘가치를 생산하는가’를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